

여야 입법 전쟁 예고…또 다시 전운 고조

민주·사법개혁안 처리 방침에 국힘 강경 저지 의지 밝혀

9일부터 입법전쟁 필비 충돌…여야 의총 열고 전략 숙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강경 저지의지를 보이면서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12월 임시국회(10일 시작)를 소집한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 주요 법안 처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에 대한 우선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국회법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0석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장기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같은 이유로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도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이 내년 초 만료되는 상황에서 조희대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로 주요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고 보고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9·14일, 21·24일 즈음에 본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 순서와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만약 필리버스터 대치가 벌어지면 이론적으로는 하루에 한 건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놓고서는 당내에서도 위헌 논란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일부 법안의 경우 내용이 미세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여론전과 필리버스터를 병행하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놓고는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자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반격을 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 고발회' 형식의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외곡죄 신설법 등이 위헌이라는 메시지를 더욱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숙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최근 당소속 상임위원회와 간사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상임 위원회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들의 발언 순서를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 처리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60명씩 조를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 강훈식 비서실장(오른쪽)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1인1표제' 민주당 중앙위서 부결

의결정수 '공천 룰' 2표

'1인1표제' 28표 각각 부족

정 대표 리더십 타격 불가피

즉시 재부의는 어려울 듯

고 밝혔다.

중앙위원회 총 596명 중 373명 (62.58%)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으로 각각 당헌 개정의 최종 판문을 넘는데 실패했다.

공천 룰 개정안은 의결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에서 2표가, 1인 1표제는 28표가 각각 부족했다.

앞서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 도입을 비롯한 권리당원 권리 강화를 공약했으며 지난달 17일 본격적인 추진 방침을 밝혔다.

1인 1표제는 당 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 투표에 부여됐던 가중치를 없애고 권리당원과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를 두고 당 민주주의 강화라는 찬성 입장과 함께 영남을 비롯한 취약지역 의사가 과소 대표되고 강경 당원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동시에 당내에서는 조직표인 대의원보다 권리

당원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정 대표가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당 압세 지역인 '전략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등의 보완책이 담긴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민주당은 1인 1표제 도입 안건의 재추진은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나 공천 룰 개정안은 지방 선거를 앞둔 만큼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함께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은 예비후보가 5인 이상일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내에서 큰 비판이 없었던 이 개정안까지 부결된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정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진수기자

서삼석 '전력망 설치 주민의견 청취2법' 발의

국가 전력망 사업의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배제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345kV 신해남~신장성T/L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2023년 11월 송전선로 입지선정 용역을 시작으로 총 4가지 경과대역을 대상으로 지난 8월 기준 4차례 입지선정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기초지자체 11곳 중 6곳이 포함된 경로가 확정됐다. 그러

나 서삼석 의원실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된 4개 안을 분석한 결과, 출발지와 종착지는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인구가 많은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된 것으로 확인돼 형식적 검토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읍·면·동 단위 입지선정위원 구성 시 주민총회 선출 의무화 ▲사업 추진 전 주민설명회 의무 개최를 규정했다. 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승인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진수기자

문금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선출안 등 임명요청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역

량, 자질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인사청문은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해 인사청문으로 인한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김진수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ahp.or.kr>

